

대만, 제2의 우크라이나인가?

지정학 분석 2022년 3월

▶ 리서치센터 | 2022년 3월 15일

Executive Summary

리서치센터 지정학분석팀

유승민 팀장 (兼 글로벌투자전략팀장)

strategist.you@samsung.com

박해란 선임연구원

hyerani.park@samsung.com

현황과 쟁점


-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에서 핵심은 'One China'원칙. 정치적으로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해야 하며, 국제적인 주권체제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정치체(polity)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양안은 1992년 '중국이 하나'라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하나의 중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금까지 갈등의 원인이 됨
- 1990년대 이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소위 3개의 공동성명(Joint Communiqué of the U.S. and PRC)에 의거,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과의 공식관계 단절을 재확인하는 기조. 하지만 중국이 패권경쟁의 라이벌로 성장하면서, 미국의 대만 정책도 변화 일로에 있음. 최근에는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과 자체적인 방위력 증강을 위한 지원으로 선회 중
-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침공을 받았음에도 NATO 회원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이 아님에 따라 속수무책인 현실을 대만에 빗대어 우려. 금융시장 참여자들도 만약에 있을 사태를 경계.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무력충돌이 임박했거나 가까운 시일 내 현실화될 확률은 희박
- 군사적 관점에서 미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이 장기적으로 협상될 수 있고 분쟁의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한 군사력 사용을 보류'할 것으로 예상. 한편 정치적으로도 미국이 여전히 'One China' 원칙을 존중하는 이상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명분은 없음. 중국 내부의 상황도 대만과 통일이 시급한 과제는 아님

전망 및 투자전략 시사점

- 2월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태평양 지역(한반도~남중국해 라인)은 글로벌 지정학의 최대 관심지역으로 부상 중. 'IoT'의 급속한 확산이 성장을 위한 주요 원자재의 왕좌에서 원유를 밀어내고 반도체의 위상을 제고시켰기 때문. 전세계 반도체 생산을 과점하고 있는 이 지역의 안보는 글로벌 경제에서 최대 현안. 그러나 투자 관점에서 대만의 지정학 위험에 대한 단기적인 헤지(hedge)와 포트폴리오 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결론
- 물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지난 30여년간 구가했던 단극(單極)체제가 종식되고 다극(多極)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경종. 향후 다른 갈등 지역에서도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對美 도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됨.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와 신냉전 도래는 경제와 금융시장에 '장기적'으로 부담. 대립의 결과로 지역/자산별 차별화 심화, 안보 요인에 의한 규제강화(ex. 공급망 재편) 및 경제적 비용 증가(ex. 방위비, 사이버 및 의료 안보 투자)가 불가피

Contents

01	대만, 제2의 우크라이나인가?	5p
	1-1.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대만 해협	5p
	1-2. 대만 문제의 핵심은 「One China」 이슈	7p
	1-3. 미국의 중국, 대만정책 변화	11p
	1-4.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13p
	1-5. 글로벌 투자전략 시사점	15p
02	주요국 지정학위험 지수(GPR) 추적	16p
	2-1. GPR로 본 관찰국가	16p
	2-2. 주요국의 GPR 추이	17p
03	신흥국 CDS 프리미엄 추적	19p
04	2022년 주요 지정학 관련 이벤트	22p



養兵千日, 用在一時 (양병천일, 용재용시)
장기간의 군대 육성으로 한 때의 위기에 대비한다.

- 삼국지(三國志) -

1. 대만, 제2의 우크라이나인가?

1-1.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대만 해협

- 지난해 중국의 군용기들이 총 972차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함¹.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과 대만의 고위 군관계자들은 중국과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Philip Davidson)은 지난해 의회 청문회에서 6년 이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대만의 국방장관이 추이궈정(邱國正) 역시 2025년 이후에 중국이 전면적인 대만 침공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함²
- 표면적으로 중국은 대만과 평화통일을 옹호. 그러나 경우에 따라 무력사용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 대표적으로 2005년 3월 제정한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³을 통해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8조)⁴. 미국은 중국이 대만과 분쟁의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당분간 군사력 사용을 보류할 것이나, 대만이 적극적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⁵.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계획은 지속되고 있으며 군사력은 규모와 질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음⁶
- 대만 역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음. 2022년 국방예산은 공군력 증강 등에 특별예산을 편성한 168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은 대만에 전투기(F-16V 66대)와 신형 전차(M1A2T 108대) 등의 대규모 군사장비를 판매하고 신속한 배치를 지원.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연합군사훈련에 대만이 참여하고 군사자문과 교류를 하는 등 군사협력도 강화. 미국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마이클 물런(Michael Mullen) 전 합참의장이 이끄는 특사단을 파견하여 이 지역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
-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침공을 받았음에도 NATO 회원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이 아님에 따라 속수무책인 현실을 대만에 빗대어 우려. 이에 대해 미국 관료들은 '지적으로 게으른(intellectual lazy)' 비교라고 일축. 그럼에도 미국 정부의 대만 정책은 소위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 거리. 실제 일본 등 아시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커트 캠벨(Kurt Campbell)은 독일에서 열린 마셜펀드 싱크탱크 행사에서 아베 前 일본 수상에게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⁷
- 본 보고서는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에 대해 살펴보고, 금융시장에서 단기적 헤지나 포트폴리오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함

¹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이 설정하는 공역(公域). 국제법상 주권을 가진 '영공'으로 인정되지 않음. 영공에서부터 식별거리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상이 아닌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선포로 설정됨

² 각각 The Guardian의 '21년 3월 10일, 10월 6일 보도

³ 재정 배경은 8페이지 '양안관계(兩岸關係)의 역사'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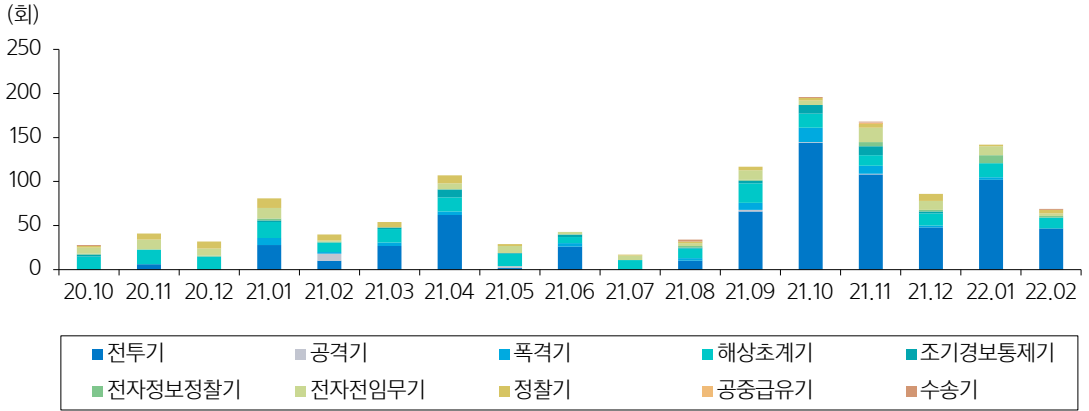
⁴ 대만의 독립으로 이어질 중대한 사건의 발생 또는 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한 상실을 초래한 경우, 중국은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하기 위해 비평화적 수단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⁵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미국 국방부

⁶ 중국 인민해방군은 2019년 국방백서에서 2027년까지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의 통합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군사전략, 인력, 무기, 장비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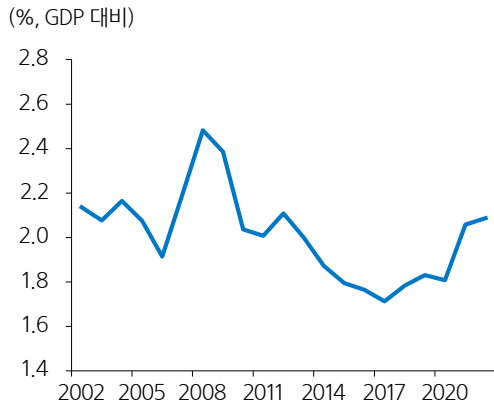
⁷ '아시아 차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인도태평양 조정관(Coordinator for the Indo-Pacific)

증가하고 있는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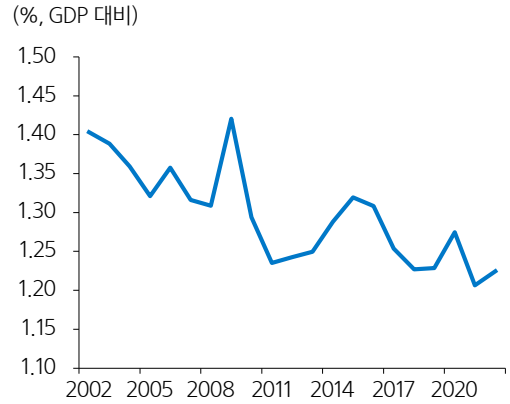
참고: 월별 누적횟수
 자료: 대만국방부, 삼성증권 정리

대만 국방예산/GDP



참고: 2022년은 예산을 기준으로 추정
 자료: CEIC, 삼성증권

중국 국방예산/GDP



참고: 2022년은 예산을 기준으로 추정
 자료: CEIC, 삼성증권

1-2. 대만 문제의 핵심은 「One China」 이슈

양안관계(兩岸關係)의 역사

- 2차 세대전 이후인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은 내전을 벌임. 이 결과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을, 타이완섬으로 패주한 장제스는 중화민국을 수립. 이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중국과 대만관계를 ‘양안관계’라고 부름. 양안(兩岸)이란 자연적인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만해협을 사이로 서안(西岸: 대륙)과 동안(東岸: 대만)으로 마주보는 관계를 의미. 양측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외교가 아닌 분단상태의 특수한 관계라는 인식을 담고 있음
- 양안관계는 시대별 6단계로 구분. 1949~87년까지는 ‘양안 단절기’. 이 38년간 중국과 대만은 전혀 교류가 없었음. 대만은 국민당이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 ‘삼민주의(三民主義)’에 의한 통일 중국을 내세우며 대륙과 ‘불접촉, 불담판, 불타협’의 정책을 견지⁸. 중국 또한 무력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며, 수차례의 대규모 군사도발을 감행. 대표적으로 1958년金門도 포격이 있었으며 간헐적인 무력충돌이 1981년까지 이어짐
- 1987~92년은 민간차원의 ‘양안 교류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시대에 들어서 중국 내부에서는 평화통일방안이 논의되기 시작. 특히 양안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는 중국이 1979년 1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이 발표하고 무력통일에서 평화통일로의 정책전환을 공식 선언하면서부터. 이어서 중국은 1월 3일 ‘통상, 통항, 통신’의 ‘삼통(三通)’과 ‘경제, 문화, 체육, 과학기술 교류’의 ‘사류(四流)’를 제안
- 또한 중국정부는 대만에 1981년 9월 자본주의 및 군대유지 등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통일 9개 방안과 1982년 12월에 ‘일국양제’ 통일방식을 제안. 이에 화답하여 대만은 1985년 ‘대륙교역 3원칙(大陸交易三原則)’을 마련하여 중국과 간접무역을 승인하고, 1987년에는 민간교류를 통한 양안교류를 추진. 이를 위해 1990년 대만에서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 해기회)가 중국에서는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해협회)가 설립. 이들 기구는 1992년에 「하나의 중국(One China)」원칙⁹을 지지하는 ‘92공식’을 발표
- 1993~2000년은 ‘양안모색기’. 전임 장징궈 총리의 사망으로 직무승계를 한 뒤, 총통에 당선된 리덩후이는 타이완에서 성장한 본성인(本省인)¹⁰ 출신의 최초 총통. 그는 대륙지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중화민국을 추구. 이에 따라 대륙 수복을 꿈꾸던 보수적 국민당 내부세력과 갈등이 벌어졌고, 중국 역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96년 9대 총통선거에 개입을 시도했으나 역풍이 불어 리덩후이가 재임에 성공. 이때부터 대만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민주화 바람과 함께 소위 ‘두개의 중국(兩個中國)’이 주장되며 독립정책을 펴기 시작하여 양안관계가 다시 냉각. 양안의 대화도 ‘98년 제2차 왕구(汪辜)회담 이후 사실상 중단되기에 이름

역대 대만 총통

구분	1~5대	6~7대	8~9대	10~11대	12~13대	14~15대
총통	장제스(蔣介石)	장징궈(蔣經國)	리덩후이(李登輝)	천수이벤(陳水扁)	마잉주(馬英九)	차이잉원(蔡英文)
재임기간	48.5~75.4	78.5~88.1	88.1~00.5	00.5~08.5	08.5~16.5	16.5~현재
소속정당	국민당	국민당	국민당	민주진보당	국민당	민주진보당

자료: 주요 언론, 삼성증권

⁸ 쑨원(孫文)이 주장한 중화민국 정치강령. 삼민주의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의미. 쑨원은 중국 국민당의 창립자인 정치가(1866~25)

⁹ 중국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나눌 수 없고 하나이며,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 또는 이데올로기

¹⁰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에 중국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건너온 한족과 그들의 후손을 지칭하는 용어로 타이완 원주민과 구분됨

- 2000~08년은 ‘양안의 긴장기’. 정권교체에 성공한 첫 민주진보당(민진당) 출신 ‘천수이벤(陳水扁)’ 대만총통은 ‘대만해협 사이에 두고 한쪽 각기 한 나라씩 존재한다’는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주장하면서 양안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됨. 이에 맞서 중국은 2005년 3월 전인대에서 ‘반분열국가법’을 재정 하면서 맞대응. 대만이 지속적으로 독립을 주장한다면 무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 다만 이러한 긴장 중에도 대만 내 친중세력과 중국의 접촉은 활발히 이어졌음¹¹
- 2008년 3월 총통선거에서 국민당 ‘마잉주(馬英九)’가 선출되자 양안관계가 급격히 개선. 2008~16년은 양안의 ‘발전기’. 2008년 5월 후진타오 주석과 집권 국민당의 당수 우보송(吳伯雄)은 국·공 영수회담을 개최. 이들은 ‘92공식’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것을 합의하였고, 국민당은 대만독립을 원치 않는다고 공개 천명. 이후 ‘삼통(三通)’이 재개됨으로써 다시 양안교류가 확대. 또한 2010년 6월에는 양안 자유무역을 위한 경제협력기본협정(經濟合作架構協定,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이 체결되었고¹², 이어 2014년 3월에는 양안 서비스무역협정(海峽兩岸服務貿易協議, CSSTA)까지도 비준됨
- 하지만 대만의 내부 정치상황은 반중국 정서가 확산되면서 국민당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정부 운동인 ‘해바라기학생 운동(太陽花學生運動)’이 발발했으며¹³, 대만 국민들 사이에도 양안 서비스무역협정으로 대만 경제가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이 결과 마잉주 정권의 지지도가 급락했으며 결국 재선에 실패하면서 민진당으로 정권이 교체됨
-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양안 냉각기’. 2016년 대만의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이 총통으로 선출. 선거구면에서 차이잉원은 양안관계를 초당적인 기반에서 추진하여 지속적인 양안관계의 평화안정과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공약. 하지만 당선 이후 중국정부의 ‘92 공식’을 인정요구에 반대. 차이잉원 집권이후 양안의 우호적이고 공식적인 교류는 중단된 상태. 차이잉원은 구시대적 양안관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단절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
- 차이잉원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¹⁴을 통해 무역상대국을 다변화함으로써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이고자 노력. 이에 대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9년 1월 대만을 ‘일국양제’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였으며, 상황이 여의지 않으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 이런 양안관계의 악화로 현재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¹⁵

¹¹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만의 제1야당 총재인 리엔잔(連戰)주석, 제2야당의 쑹쑤위(宋楚瑜)주석 등이 후진타오와 회담을 개최

¹²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성격이나,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치 않는 중국의 입장으로 명칭을 달리했음

¹³ 일명 318학생운동. 2014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만의 대학생과 사회운동세력이 입법원을 점거농성한 학생·사회운동가들

¹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자 대양주, 동남아, 남아시아와 협력하여 교류하기 위한 정책

¹⁵ 6페이지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월별 침범 횟수 등 참고

대만과 중국의 관계 변화

양안관계	일시	내용
단절	'49. 7월	장제스 내전에서 패한 뒤 대만에 망명정부를 수립
	'54. 9월	인민해방군이 진명을 포격 1차 대만해협 위기
	'58. 8-10월	중국, 대만 진먼다오에 47만여발 포격, 2차대만해협위기
	'79. 1월	중국,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 발표 '평화적 통일방침' 천명 및 '3통' 제안
교류	'87. 11월	대만정부, '탄친법'제정, 대륙내 친척방문 허용
	'91. 5월	대만, 본토탈환을 위한 무력사용방침 폐기
	'92. 11월	'92공식'발표, '하나의 중국원칙' 인정, 각자 명칭 사용
	'93. 4월	왕다오 한해협회 회장- 구전푸 해기회 이사장 회동 (싱가포르)
모색	'96년	중국, 대만독립추구세력 위협, 3차 대만해협 위기
	'00. 3월	대만 총통 민진당 천수이벤 당선
긴장	'01. 1월	대만, 진먼다오, 마쭈다오와 중국 푸젠성에 한해 '소삼통(통항, 교역, 우편거래)' 허용
	'02. 8월	천수이벤, 대만 공식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의사 제의, '일변일국론' 천명
	'03. 8월	대만 입법원, 주권문제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법안 승인
	'05. 1월	분단 55년 만에 양안 간 전세기 직항 합의
	'05. 4월	후진타오-렌잔 대만국민당 주석, 60년 만에 첫 국공수뇌회담 (베이징)
	'05. 5월	천수이벤, 중국-대만 정부지도자 간 공식회담 제의, 중국은 대만독립 포기해야 대화가능 일축
	'06. 2월	천수이벤, 국가안전회의에서 국가통일회의 해체와 통일강령 삭제 발표
	'07. 3월	천수이벤, 4유(독립, 신헌법, 국호개정, 발전) 1물유(좌우노선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독립노선 천명
발전	'07. 4월	후진타오-렌잔 국민당 전 주석회담 (베이징)
	'08. 3월, 5월	대만 총통 마잉주 당선, 삼불(불독립, 불통일, 무력불사용) 정책 발표
	'08. 6월, 11월	제1차 양안회담(중국인의 대만관광 허용 합의), 제2차 양안회담 (3통 합의)
	'09. 4월, 11월	제3차 양안회담(중국 자본의 대만 진출 개방 합의) 양안 간 금융감독협력 MOU 체결
	'09. 12월	제4차 양안회담- 어업노무협력, 농산물, 표준검사 인증 협력 합의
	'10. 1월, 5월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상개시, 중국 대만 상호관광사무소 개설
	'10. 9월	중국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SFA)이 정식 발효
	'11. 1월	중국-대만 ESFA 경제협력위원회 공식 출범
	'12. 1월	대만 총통 마잉주 재선
	'12. 12월	대만, 중국 상하이에 첫 무역사무소 개설
	'13. 6월	시진핑 국가주석, 우보슝 대만 국민당 명예주석 회동 (베이징)
	'13. 8월	중국 양안교류기금 출범
	'14. 2월, 6월	중국-대만 1차 장관급 회담(난징), 2차 장관급 회담(타이베이)
	'15. 11월	시진핑-마잉주 첫 정상회담
냉각	'16. 1월	대만 총통 민진당 차이잉원 당선
	'17. 10월	차이잉원 '92공식' 및 '하나의 중국원칙' 불인정, 새로운 양안관계를 요구
	'18. 4월, 5월	대만독립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모여 포르모사연합 결성, 중국정부의 군사행동
	'19년 1월	시진핑, 평화통일 지향하지만 무력사용 가능천명
	'20년 1월	차이잉원 대만 독립국가 지향 천명,
	'21년 3월	마-중 고위급 회담이후 대만 자주권 주장, 중국 무력사용, 엄중경고,
	'22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전직 고위 관료를 중심으로 한 미국 특사 대만 방문

자료: 주요 언론

‘One China’ 합의에 대한 양안의 다른 입장

-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이란 정치적으로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해야 하며, 국제적인 주권체제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정치체(polity)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은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통일방안의 핵심. 한 국가에 이질적인 두 체제(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두는 형태의 통합모델로서 최종적인 통일을 향해 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대안. 이미 마카오, 홍콩에 적용 중이며, 향후 대만을 염두한 중국식 포용정책. 이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한 인물은 덩샤오핑. 그는 “일국양제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며 일국은 ‘화(和)’ 양제는 ‘부동(不同)’이다”라고 설명¹⁶
- 양안 사이 ‘92공식(九二共識, 1992Consensus)’ 합의가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된 중요 이벤트. 1992년 중국의 해협회의(海峽會)의 제안에 대해 대만의 해기회(海基會)가 “(양측이 그 내용을 당장 합의하기 곤란한) ‘하나의 중국’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구두(口頭)로 표명하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을 합의하자”고 역제안한 것을 중국이 받아들인 것. 이 결과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을 견지하되, 그 표현은 양안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各自表述)”는 소위 ‘일중각표(一中各表)’라는 다소 모호한 양안관계의 원칙이 탄생
- 당시 양안은 ‘중국이 하나’라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하나의 중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이는 훗날 논쟁의 단초를 제공함.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고, 대만은 중국 대륙과 대만 모두를 중국의 일부로 봄. 중국 대륙은 ‘중국’이라는 국가안에 대만을 포함시키는 반면, 대만은 ‘중국’을 대만과 대륙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인식. 즉 중국 대륙은 ‘중국’을 현재 존재하는 ‘국가’의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대만은 ‘중국’을 현재 대륙을 차지한 중국이 아닌 미래의 통합된 국가 혹은 문화적 의미의 중국으로 인식하고 있음
- 대만에서 ‘92공식’을 합의했던 당시는 국민당 집권기로 중화민국이란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 따라서 대만에서 ‘일중각표’의 개념은 전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음. 그러나 이후 양안관계가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92공식은 정권 교체와 정세 변화에 따라 부정되어왔음. 특히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자, 중국 대륙 중심의 논리가 주도하고 이에 대해 대만의 반발은 심화
- 2000년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이 정권교체를 실현하자 국민당이 ‘일중각표’를 당 강령으로 삼고 친중국 노선을 견지하면서 “일변일국”(一邊一國)을 제기한 천수이볜 정부를 견제. 이에 따라 ‘일중각표’는 친중국과 반중국 노선을 양분하는 진영대립요소로 자리매김하며 대만당국의 양안관계 전개를 가능할 수 있는 결정요소가 되었음¹⁷. 예를 들어 2016년 이후 연임을 하며 대만을 통치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한번도 ‘92공식’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 긴장이 지속
- 대만 내외부의 변화도 ‘92공식’에는 도전적 요인. 특히 2014년 행정장관의 선출과정에서의 보통선거권을 쟁취하려는 홍콩의 우산운동과 2019년 범죄인 인도조약 반대시위 그리고 2020년 홍콩보안법 반대시위 등을 거치면서, 일국양제의 효용성은 심각하게 실추. 무엇보다 대만인들의 인식변화가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통일논의에 큰 도전이 되고 있음. 지난 2020년 10월 대만 대륙위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만인의 89.3%가 일국양제에 의한 통일을 반대하고 찬성은 4.9%에 불과했음¹⁸

¹⁶ “저는 ‘하나의 국가, 두 가지 제도’가 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 일은 국제적으로 매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세계 각국에서 국가 간에 남겨진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모범사례를 제공할 것입니다.”(邓小平, 1993: 68)

¹⁷ 하범식, 「차이잉원 집권 시기 양안관계의 변화와 전망」, 성균치이나브리프, 2017년 5권3호

¹⁸ 大陸委員會, <www.mac.gov.tw> 臺灣主流民意拒絕中共「一國兩制」的比率持續上升, 更反對中共對我軍事外交打壓

1-3. 미국의 중국, 대만정책 변화

1990년 이전, 미-중 밀월과 대만의 소외

- 1990년대 이전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소위 3개의 공동성명(Joint Communiqué of the U.S. and PRC)에 의거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과의 공식관계 단절을 재확인하는 기초를 보였음. 3개의 공동성명은 1972년 2월 ‘상하이 공동성명’, 1978년 12월 ‘미-중 수교 공동성명’ 그리고 1982년 ‘8.17 공동성명’ 등
-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은 미-중 사이 공동인식에 기초하여 ‘① 평화공존원칙에 입각, 패권추구 반대, ② 제3국 대항을 목표로 하지 않는 양국관계의 정상화, ③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과 중국인 자신에 의한 대만문제 평화적 해결 필요성의 인정, ④ 정세추이에 따른 대만 주둔 미군철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이후 1979년 ‘공동성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천까지 도달.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중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재확인. 이에 따라 양국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3월 1일에 대사를 교환되었고 대사관을 설립. 동시에 미국은 4월 10일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 Act)’을 제정해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 대만과의 관계를 비공식적인 지위로 정의. 때문에 대만에 주둔했던 미군사령부가 4월 해체되고 12월 31일에 미-대만 상호방위조약이 만료됨
- 1981년 레이건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만에 대한 신무기 공급정책으로 미-중관계는 일시적으로 냉각. 중국은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판매에 반대를 표명하고 대미관계 격하를 시사. 그러던 중 같은 해 8월 17일 ‘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② 미-대만 간의 비공식관계 계속유지, ③ 미-중 상호 간 주권 및 영토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④ 중국은 대만문제가 국내문제임을 재확인, ⑤ 미국은 대(對)중국관계를 중시하며, 2개의 중국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미-중 공동 성명이 발표되며 갈등이 봉합
- 1985년 이후에는 중-소 관계개선과 중국의 독립자주외교노선 강화에 따라 미-중 간 전략적 이해일치의 범위가 축소되기도 함. 그럼에도 고위 인사 상호교류, 경제협력 및 과학기술 교류증대 등을 통해 양국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속에 꾸준히 발전. 특히 중국 건국 후 최초로 1986년 11월 미국합대가 청도항(靑島港)에 기항하는 등 군사관계도 증진. 그러나 1989년 6월 천안문사건 이후 미-중 양국 간 상호제재와 보복조치로 양국관계가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

1990~2000년대, 미-중 새로운 관계 설정과 대만 활용 시작

- 1990년대 들어 미-중 양국은 일시적으로 냉각된 양국 관계의 개선을 시도. 미국은 중국의 지나친 고립방지를 위해 실리외교에 기반한 포괄적 포용정책(comprehensive engagement policy)으로 관계회복을 추진. 양국의 협력과 대립상태를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고위인사교류를 지속했고,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1997년 10월 중국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미국을 방문. 이를 계기로 그간의 경색관계를 청산하고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건설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ship)”의 추진노력에 합의. 특히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 주도의 반테러 국제공조노력에 협조하면서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 미-중 양국은 수차례 걸친 양국 정상회담을 지속하여 ‘건설적 협력관계’를 심화 발전
- 그러나 2005년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위협론이 대두되기 시작. 중국측은 미-중 간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 특히 2005년 8월 제1차 미-중 전략대화가 베이징에서, 12월 제2차 대화가 워싱턴에서 개최됨. 그리고 이듬해 4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양국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모색하기도 함. 즉 중국측은 자신의 부상을 인정하고 기회로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고, 미-중 간 전략적 대화·협력(상호존중·대화·협력)의 필요성 역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중국을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 칭하면서 중국의 대내외 정책에서 투명성 제고, 인권개선 및 민주화 등 중국의 가치·체제전환을 촉구·압박

- 미국과 중국 관계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은 경제적 역량의 쇠퇴를 실감한 반면 중국은 30년 가까운 장기간에 걸친 고도 경제성장으로 미국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급속히 상승하였고, 대외적 자심감과 민족주의적인 자부심도 크게 고양. 이 결과 미-중 패권경쟁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기 시작. 때문에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오바마는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대만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남
- 2009년 11월 15일 중국을 방문한 오바마가 후진타오 국가주석에 경제와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중국의 반응이 미온적으로 반응. 또한 당시 오바마-후진타오 공동성명에서 등장한 또 다른 논쟁은 미-중 간 '핵심이익(core interest)'. 중국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서서히 갈등으로 기울기 시작. 2010년 1월 미국은 대만에 64억 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제안하며, 대만해협에서 미-중의 갈등은 표면화

2010년대 이후, 높아진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

-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봉쇄를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 외교안보전략인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발표. 그리고 동시에 남중국해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 이에 대해 2012년 2월 당시 부주석이던 시진핑(習近平)은 미국을 방문하여, 미-중 간 상호전략적 의도를 객관적·이성적으로 대하고, 각자의 이익을 존중하며, 중대한 국제·지역 문제에서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New Pattern of Relationship between Great Powers)' 수립의 필요성의 제기
- 그러나 2013년 11월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 같은 해 12월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작업개시, 그리고 2014년초 서사군도 석유탐사선 진입, 세계전략의 일환인 일대일로 프로젝트 개시, AIIB 창립선언' 등 공세적으로 나오자 미국은 '신형대국관계'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 특히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중 관계와 미국의 대만정책은 큰 변화를 보임.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카드를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추구
- 지난 수년간 미국 내에서 발표된 대만관련 법안들은 미국의 대만정책 변화를 보여줌.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2018)은 미국과 대만의 정부 간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을 허용하고, 소위 타이베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2020)은 '미-대만 간 경제교류 및 협력 강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원, 대만의 외교관계 강화 지원' 등을 포함. 또한, 지난 해 4월 미 상원에서 통과된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원과 경제무역관계 강화뿐 아니라, 중국의 무력 침범을 억제하기 위한 대만의 자체적 방위력 지원까지 포함¹⁹

¹⁹ 이동규, 미중 전략경쟁시기 대만문제의 쟁점과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2021

1-4.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가능성을 경고. 장기적으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임박했거나 가까운 시일 내 현실화는 어렵다고 보임. 중국군이 지속적으로 대만에 압박을 가하면서 돌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잠복해 있으나,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우려는 아직 낮다는 의견. 다만 국제사회에서 ‘One China’ 원칙이 부정되고 대만이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되는 상황이 된다면 중국은 이를 군사행동의 명분으로 삼을 것

중국의 현 군사역량으로 한계

-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1년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이 장기적으로 협상될 수 있고 분쟁의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한 군사력 사용을 보류할 것’으로 예상²⁰. 다만 ‘대만의 독립 선언, 대만 내부의 정정 불안, 대만의 핵무기 획득, 중국과 통일 대화 재개 무기한 연기, 대만 내정에 대한 외국의 군사 개입’ 등의 상황이 출현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 이에 대한 근거로 전술한 ‘반분열국가법’을 거론
- 보고서는 유사시에 중국이 초기부터 대만에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보다, 다양한 압박옵션을 먼저 사용할 것으로 예측.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징벌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먼저 보내는 자제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는 대만의 비상상황에 미국의 개입을 잠재적으로 억제하려는 목적도 가짐. 그러나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비대칭전력을 활용해서 미국의 개입을 지연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 한다고 전망. 이를 위해 여러 군사 옵션을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시작할 수 있음²¹. 그럼에도 보고서는 현재 전력으로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과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
-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 가장 직접적인 우려는 인민해방군의 대만 상륙작전. 보고서는 중국군의 공개된 문서를 통해 상륙 작전에 대한 다양한 작전 개념을 설명. 구체적으로는 군수, 항공, 해군, 전자전 등의 지원과 함께 수행되는 복합적 합동상륙작전(Joint Island Landing Campaign)을 예상. 해안 방어선을 돌파하거나 우회 교두보를 구축 및 건설하고 대만 서부 해안선과 기타 지정된 상륙 지점으로 인력과 장비를 수송하고 주요 목표물과 대만 전체를 점령하는 것. 이를 위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2019년에 최초의 헬기 탑재 상륙 강습함(LHA) 건조를 완료했고, 2020년에는 대만 근처에서 합동 상륙작전 훈련을 실시
- 하지만 대규모 상륙작전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군사작전 중 하나로 항공 및 해상의 우위, 육지에서의 신속한 구축 및 보급, 중단 없는 지원이 필수적. 그러나 대만 침공에 대해 국제적 개입이 있으면 중국군은 해상에서 과도한 전투력을 소모하고 실패할 가능성 높다는 것. 설사 중국군의 성공적인 상륙 및 돌파를 가정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같이)²² 시가전 및 게릴라전의 복잡성이 결합되면 대만 내에서 작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경고. 때문에 중국군은 대만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이 아닌 남중국해의 대만령 섬 등에 상륙작전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예측. 이러한 형태의 침공이 중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고 가시적인 영토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동시에 대만 내부의 독립을 지지세력을 강화시키고 강력한 국제적 반발과 정치적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

²⁰ 미 국방부,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²¹ 다양한 IO가 수행하는 교란 작전(이에는 대만의 정치, 군사 및 경제 기반 시설에 대한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제한된 운동 공격이 포함). 또한 인민해방군의 특수작전부대(SOF)가 대만에 침투하여 기반 시설 또는 지도력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음. 더 나아가 중국이 대만의 공군 기지, 레이더 기지, 미사일, 우주 자산 및 통신 시설을 포함한 방공 시스템에 대한 미사일 공격과 정밀 공습을 사용하여 대만의 방어력과 저항의지를 약화시키는 작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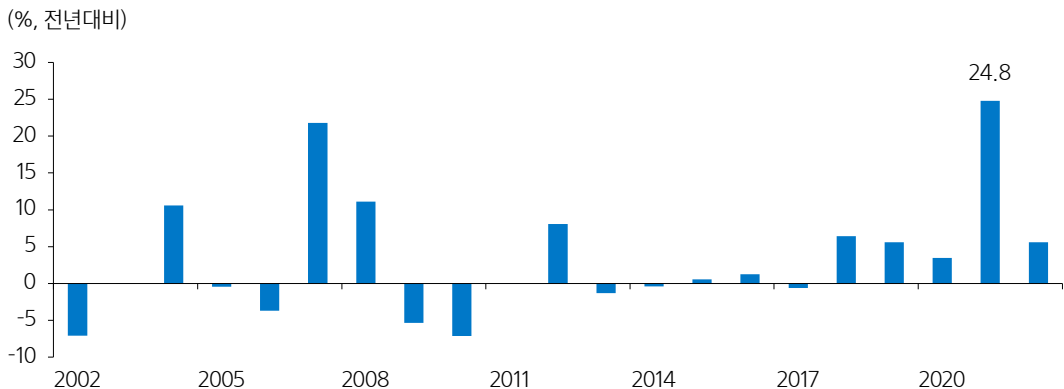
²² 필자 주

- 한편 대만도 중국에 대항하여 군 현대화와 국방부문 투자를 꾸준히 늘리며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음.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개선된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칭 전쟁을 위한 새로운 개념과 능력을 개발하고 있음.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위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만 해협의 평화, 안보 및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밝히고 있음
- 실제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미국은 대만에 F-16V 전투기 80억 달러어치의 구매를 승인. 또한 2020년에는 총 50억 달러 이상의 승인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규모가 증가. 승인된 무기 판매에는 첨단 무인 항공 시스템, 장거리 미사일 및 대포 그리고 하푼 대함 시스템(Harpoon Coastal Defense System)이 포함. 2010년 이후 미국은 대만에 23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판매

군사능력 이외의 조건도 중요

- 전술한 군사적 측면 이외에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2가지 고려 사항이 있음
- 첫째, 미국이 여전히 ‘One China’ 원칙을 존중하는 이상,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명분은 없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트럼프시대에 못지않게 경색되어 있지만, 양정상의 통화 등에서 바이든은 대만과 관련된 중국과의 과거 합의가 유효함을 확인하고 있음. 즉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대만을 활용하고 또한 인태전략의 확장차원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과 국방협력을 하고 있으나, 대만의 독립을 명확히 지지한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중국이 명분이 없는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으며, 그럼에도 현실화되면 국제사회에서 제재와 고립을 면하기 어렵게 됨
- 둘째, 중국 내부 상황을 고려할 때, 대만에 대한 침공과 통일이 시급한 과제는 아님.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부흥을 선언한 중국 지도부에게는 앞으로 상당기간 국력신장이 우선 어젠다.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중국의 국력의 성장과 함께 외교적 영향력도 확대되며 결국 시간은 중국의 편이라는 전략을 추구할 것. 즉 현 중국 지도부가 서둘러 대만 통일을 위한 정책을 시도할 이유가 없음. 물론 장기집권에 들어가고 있는 시진핑이 간헐적으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전면적 침공과 같은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지난해 대만은 무기구매에 대규모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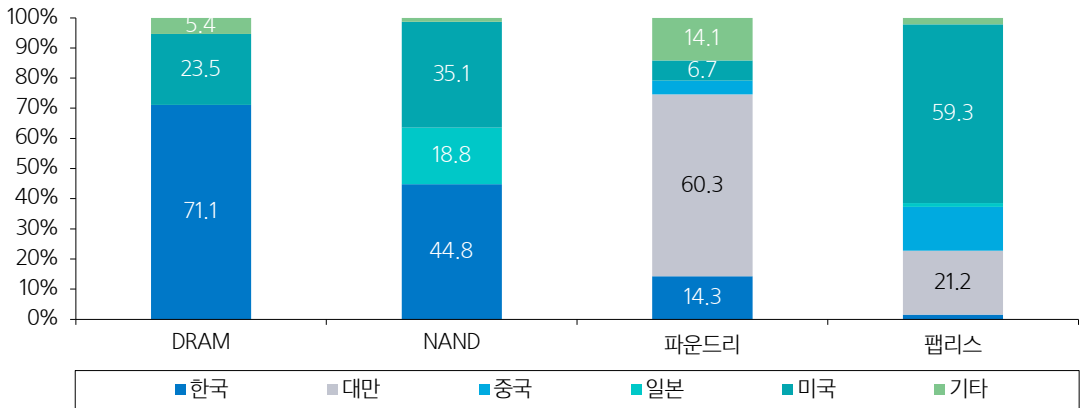


참고: 데이터는 대만 국방비 전년 대비 증가율, 2022년은 예산치
 자료: CEIC, 대만국방부, 삼성증권

1-5. 글로벌 투자전략 시사점

- 지난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태평양 지역(한반도~남중국해 라인)은 글로벌 지정학의 최대 관심지역으로 부상 중. 'IoT(internet of things)의 급속한 확산이 성장을 위한 주요 원자재의 왕좌에서 원유를 밀어내고 반도체의 위상을 제고시켰기 때문. 전세계 반도체 생산을 과점하고 있는 이 지역의 안보는 글로벌 경제에서 최대 현안.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대만해협까지 확대.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중국이 대만에 대해 더욱 과감한 군사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고 우려
- 하지만 본 보고서는 투자의 관점에서 대만의 지정학위험에 대한 단기 헤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결론. 대만과 중국 사이에 산발적이며 제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잠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중국이 전면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최근 빌 번스(Bill Burns) CIA 국장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미국과 동맹의 대응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의미가 있음²³. 장기집권을 도모하고 있는 시진핑의 입장에서 내외부 불안정성을 높이는 도박을 선택하기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의견
- 물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지난 30여 년간 구가했던 단극(單極)체제가 종식되고 다극(多極)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경종. 경제적 잠재력이 충분한 중국이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는 와중에, 러시아가 전략적 도발로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한 사건. 이번 전쟁을 계기로 다른 갈등 지역에서도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對美 도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됨.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와 신냉전 도래는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장기적’으로 부담. 대립의 결과로 지역/자산별 차별화 심화, 안보 요인에 의한 규제강화(ex. 공급망 재편) 및 경제적 비용 증가(ex. 방위비, 사이버 및 의료 안보 투자)가 우려되기 때문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부문별 주요국 점유율



참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OMDIA 자료 인용에서 재인용, 2020년 기준
 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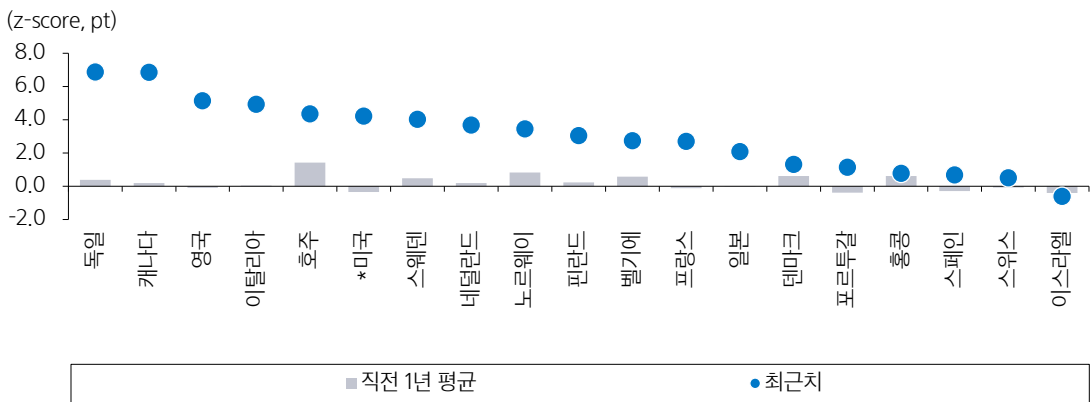
²³ FT, Ukraine war likely to influence China on Taiwan, US intelligence chief say, 2022년 3월 9일

2. 주요국 지정학위험 지수(GPR) 추적

2-1. GPR로 본 관찰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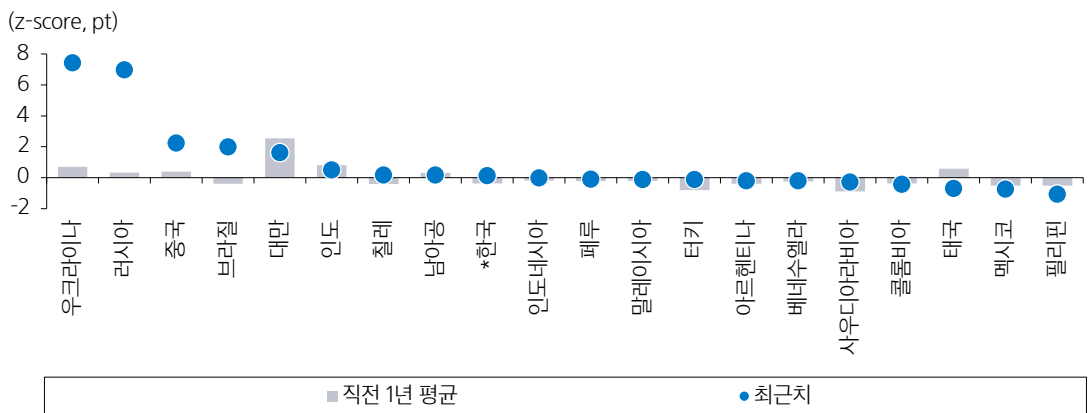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들의 GPR이 상승. 선진국은 주로 유럽국가들이 지수 상승 상위에 올랐으니, 캐나다는 특징적.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다수 캐나다로 이민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언론의 노출이 더 높은 때문. 한편 이번 호 보고서의 주제와 같이 신흥국에서는 대만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며 주목됨.

선진국 GPR의 직전 1. 평균과 최근 수치 비교 (평균 대비 변화율 기준)



자료: Matteoiacoviello.com,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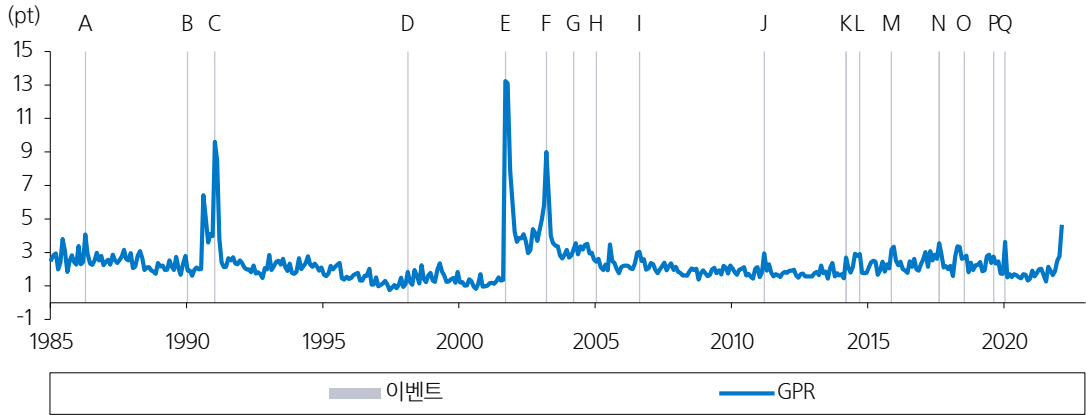
신흥국 GPR의 직전 1. 평균과 최근 수치 비교 (평균 대비 변화율 기준)



자료: Matteoiacoviello.com,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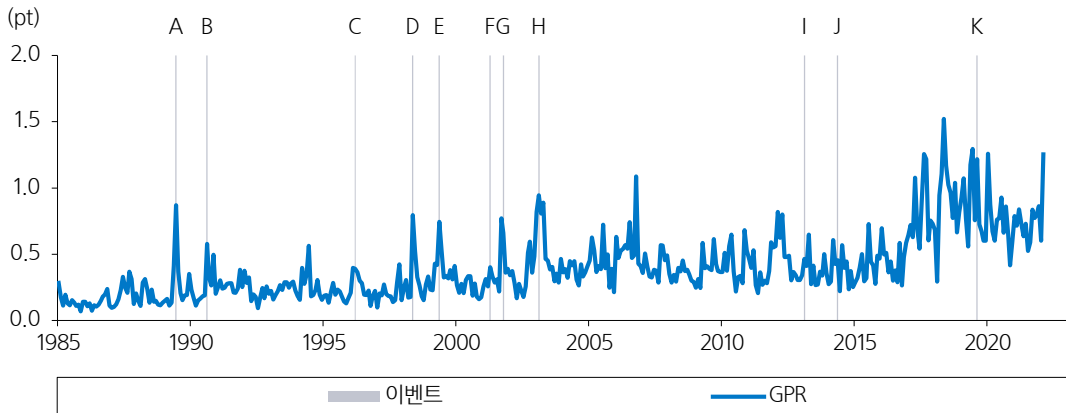
2-2. 주요국의 GPR 추이

미국의 Geopolitical Risk Index 주요 이벤트



참고: A 미 시리아 폭격 (1986.4), B 쿠웨이트의 사우디 침공 (1), C 걸프전 (1991.1), D 빈라덴 위협 (1998.2), E 9/11 테러 (2001.9), F 미 이라크 침공 (2003.3), G 마드리드 폭탄테러 (2004.3), H 폭탄테러 (2005.1), I 대서양횡단항공기 테러미수 (2006.8), J 아랍의 봄 (2011.3), K 러 크림침략 (2014.3), L ISIS 위기 (2014.9), M 파리테러 (2015.11), N 북핵 위협 (2017.8), O 미 이란 긴장 (2018.7), P 미 중 갈등 (2019.8), Q 중 코로나 확산 (2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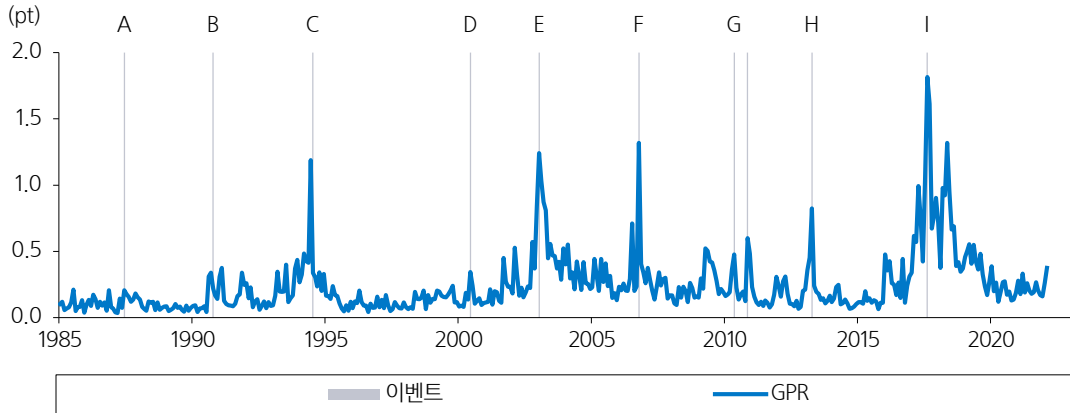
중국의 Geopolitical Risk Index와 주요 이벤트



참고: A 천안문사태(1989.6), B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1990.8), C 3차 대만해협위기(1996.3), D 인도네시아 인종폭동(1998.5), E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폭폭(1999.5), F 하이난섬사건(2001.4), G 미국 아프가니스탄침공(2001.10), H 미국 이라크침공(2003.2), I 북한3차핵실험(2013.2), J 우루무치역 테러(2014.5), K 미중 무역갈등(2019.8)

자료: 삼성증권, REFINIT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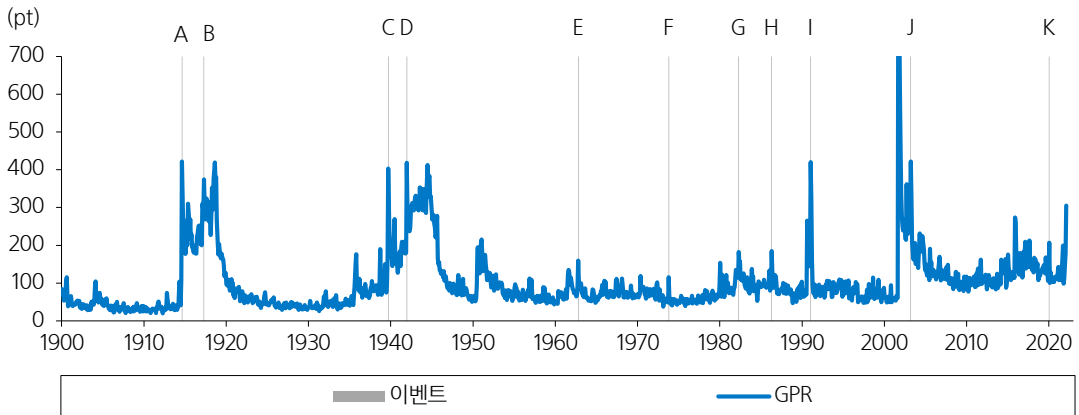
한국의 Geopolitical Risk Index와 주요 이벤트



참고: A 6월 민주항쟁, B 한-소련 수교, C 김일성 사망, D 1차 남북정상회담, E 노무현 대통령 당선, F 북한 2차 핵실험, G 유럽재정위기, H 개성공단 중단, I 북-미 긴장

자료: 삼성증권, REFINITIV

전세계 장기 Geopolitical Risk Index와 주요 이벤트



참고: A 1차 세계대전 발발(1914.8), B 미국 참전(1917.4), C 2차 세계대전(1939.9), D 일본의 진주만 공격(1941.12), E 소련 핵실험 재개(1962.10), F 1차 오일쇼크(1973.10), G 포클랜드 전쟁(1982.4), H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4), I 걸프전(1991.1), J 美 이라크침공(2003.3), K 中 코로나 확산(2020.1)

자료: 삼성증권, matteociacoviello.com

3. 신흥국 CDS 프리미엄 추적

- 올 들어 미 연준의 긴축우려가 강화되며, 신흥국 전반에서 CDS 프리미엄이 상승. 특히 러시아의 경우 최근 1년래 최고치로 크게 오름. 신흥국 전반에 비해 브라질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신흥국 CDS 프리미엄 대쉬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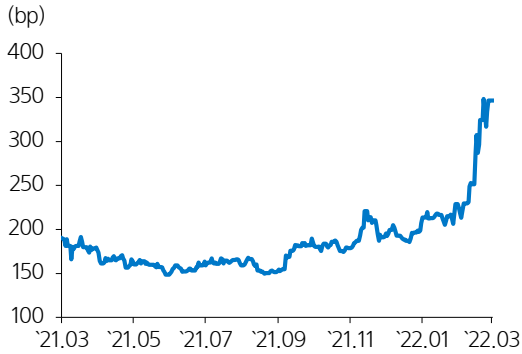
국가	CDS (bp)	MTD (bp)	1개월 (bp)	3개월 (bp)	6개월 (bp)	YTD (bp)	1년 (bp)
EM	346.37	+59.0	+122.3	+151.0	+191.9	+159.2	+156.5
한국	30.88	△0.5	+2.9	+10.3	+13.4	+11.8	+9.1
중국	60.91	△4.3	+6.7	+16.8	+27.9	+20.8	+28.5
인도네시아	113.08	△3.4	+13.4	+35.2	+46.3	+37.8	+31.9
필리핀	97.80	+2.1	+15.1	+38.2	+55.5	+41.7	+55.3
말레이시아	72.09	△4.3	+14.4	+23.1	+29.8	+26.8	+29.5
태국	43.16	+0.5	+5.3	+10.4	+7.0	+10.7	+2.6
브라질	224.72	+1.3	△6.4	+1.3	+44.8	+19.5	+25.3
멕시코	110.55	△3.7	△4.9	+10.0	+26.4	+20.4	+9.2
러시아	554.00	+0.0	+304.1	+446.6	+477.9	+429.8	+461.8

참고: 3월 14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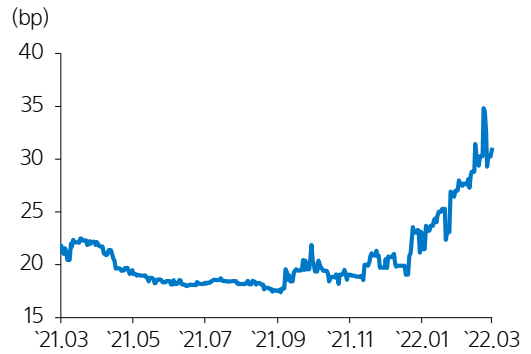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주요 신흥국 CDS Prem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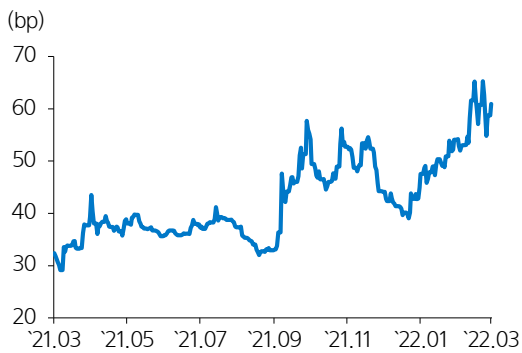
EM 5y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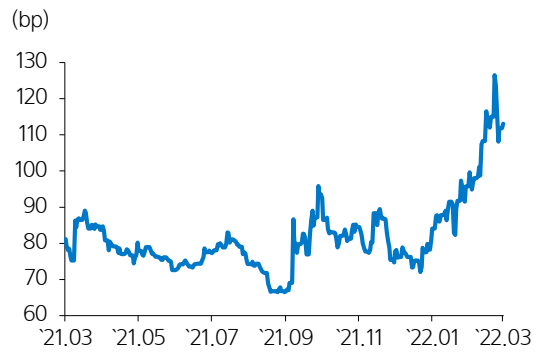
한국 5y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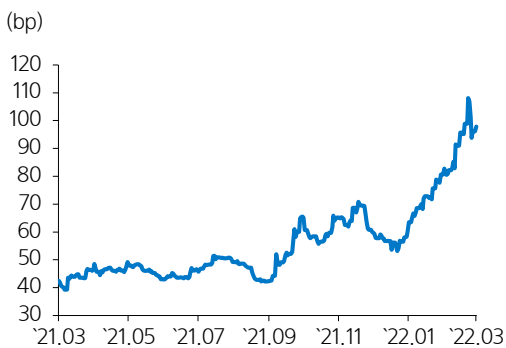
중국 5y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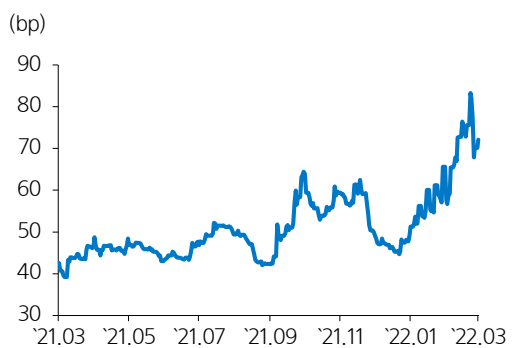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5y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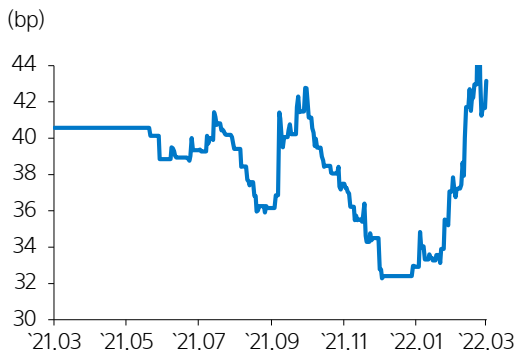
필리핀 5y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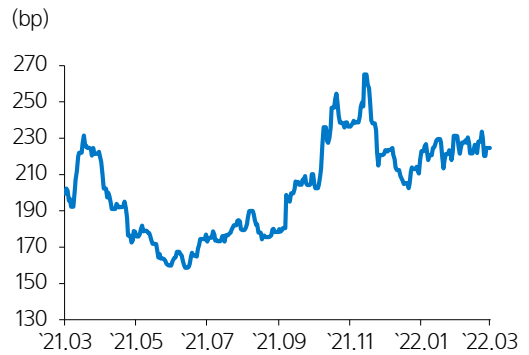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5y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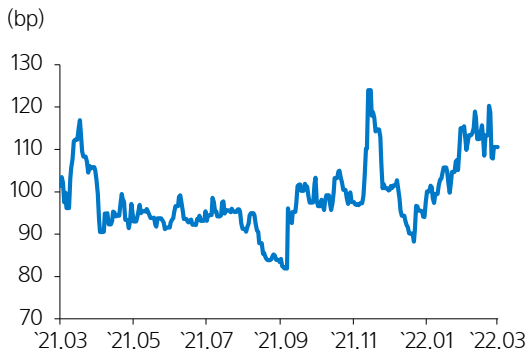
태국 5y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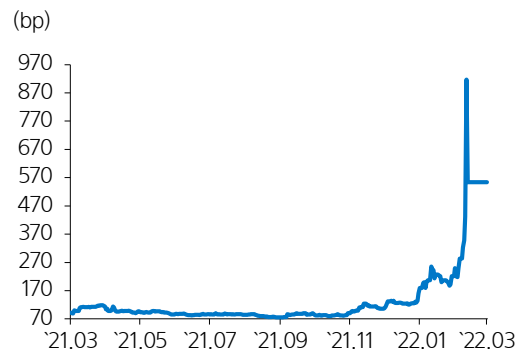
브라질 5y CDS



멕시코 5y CDS



러시아 5y CDS



참고: 3월 14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참고: 3월 14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4. 2022. 주요 지정학 관련 이벤트

일시	지역/국가	이벤트
1월 4일	이탈리아	대통령 선거
1월 17~21일	글로벌	세계경제포럼(WEF, digital Davos)
1월 25~26일	미국	연준 FOMC
2월 3일	유럽	ECB 통화정책 회의
2월 4~20일	글로벌	베이징 동계올림픽
2월 13일	독일	대통령 선거
3월 4~5일	중국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전국인민대표회의)
3월 15~16일	미국	연준 FOMC
3월 9일	한국	대통령 선거
3월 10일	유럽	ECB 통화정책 회의
3월 27일	홍콩	홍콩장관 선거
4월 10~24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
4월 14일	유럽	ECB 통화정책 회의
4월 22~24일	글로벌	IMF 정례 회의
5월 3~4일	미국	연준 FOMC
5월 9일	필리핀	대통령 선거, 총선
5월 10일	한국	제20대 대통령 취임
6월 1일	한국	지방선거
6월 9일	유럽	ECB 통화정책 회의
6월 14~15일	미국	연준 FOMC
7월 중	인도	대통령 선거
7월 21일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7월 25일	일본	참의원(상원격) 선거
7월 26~27일	미국	연준 FOMC
9월 8일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9월 13~20일	글로벌	UN 총회
9월 20~21일	미국	연준 FOMC
10월 2일	브라질	대선(1차 투표), 총선
10월 14~16일	미국	IMF 연례 회의
10월 27일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10월 29일	브라질	대선(2차 결선 투표 - 과반수 득표 실패 시)
10~11월 중	중국	20차 공산당대회
11월 1~2일	미국	연준 FOMC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12월 13~14일	미국	연준 FOMC

자료: 삼성증권 정리

삼성증권 리서치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지정학분석팀을 만들었습니다.
 정기 보고서는 월간 주기로 발간되며, 지정학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분석이 주된 목적입니다.
 각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발간된 지정학 보고서]



지정학분석 2021년 2월

이슈 1. 美 NSC 핵심들의 淸중국 시각
 이슈 2. 바이든 인선의 포석
 이슈 3.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3월

이슈 1. 미국의 淸중국 「기술유출 통제 기구와 법안」
 이슈 2. 미국의 淸중국 견제를 위한 「금융시장 법안」
 이슈 3.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4월

이슈 1. 미국의 「차이나 디카플링」 전략 시작
 이슈 2. 중국의 「국가핵심이익」과 주요 쟁점
 이슈 3.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5월

1. 디지털 화폐의 출현과 통화패권
 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추진 현황
 3.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6월

이슈 1. Build Back Better World(B3W) 구상
 이슈 2. 중국의 일대일로와 도전
 이슈 3.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7월

이슈 1. EU의 탄소국경세 시행 발표
 이슈 2. 유럽 그린딜의 이해
 이슈 3. EU의 탄소배출 감축메커니즘



지정학분석 2021년 8월

이슈 1. Geopolitical Alpha
 이슈 2. 주요 글로벌 지정학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9월

이슈 1. 시-독트린(Xi-Docctrine)의 시대
 이슈 2.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슈 3. 신진펄 2기와 투자 시사점
 이슈 4. 중국 자본시장의 기타 쟁점



지정학분석 2021년 10월

이슈 1. 북한 경제상황 점검
 이슈 2.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1년 11월

이슈 1. 2022년 7대 지정학 위험
 이슈 2. 주요 글로벌 지정학 위험 추적



지정학분석 2022년 1월

우크라이나 위기 긴급 점검



지정학분석 2022년 2월

한반도 위기, 미자위 2017 ?



신뢰에 가치로 답하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어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